

여야 '강한 대표'로 대선 주도권 잡는다

1등만 대표되고 대표위원 따로 선출 '단일성 지도체제'

더민주, 송영길·추미애 당권 도전 선언...김부겸 출마 관심

새누리도 당 대표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선출 방식이 전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결정되면서 14일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교통정리'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즉, 출마자 전원에게 투표해 1등이 대표, 2등부터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1등만 대표가 되고 대표위원들을 따로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함에 따라 후보들의 거취 정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보는 추미애, 송영길 의원 두 명이다. 추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에서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10년을 열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전대 일정이 나오면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못한 잠재적 당권 후보들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종 결심을 밝히겠다고 막판 고심에 돌입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부겸 의원의 도전 여부다. 김 의원은 "정치 선배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출마할 경우 그를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 한 명의 후보를 지원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전날 분회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대는 정권교체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대"라며 "전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도전 여부를 막판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전북 출신의 재선 신정민 의원은 주변의 출마 권유에 대해 "오래 끝 문제는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도 "정권교체

를 위해 내 경험과 자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제를 대신해서 도입되는 대표위원에 누가 도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당원·대의원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정했지만, 이번 전대는 권역별 대표위원 5명과 부문별 대표위원 5명을 뽑는 것으로 체제를 바꿨다.

권역별 대표위원은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서울·제주권, 경기·인천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즉, 호남권 대표위원은 광주·전남도·전북도당위원장 3명 중 호선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벌써 시도당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문별 대표위원은 여성·노인·청년·노동·민생 등 5개 부문에서 후보 신청을 받고서, 해당 부문 당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제회의를 열어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혁신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최고위원은 당 대표(1명), 선출직 최고위원(4명), 청년 최고위원(1명), 지명직 최고위원(1명)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1명), 정책위의장(1명)까지 9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 올림픽 선수단 격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을 방문, 리우 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많은 새누리가 '제 1당'

정세균 의장 탈당으로 더민주와 122석 같아져

총선에서 승리하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개원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현재 단순 의석수로 따져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1당'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단 한 석 차이로 더민주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지난 9일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돼 무소속이 되면서 두 당의 의석수는 모두 122석으로 똑같아졌다.

문제는, 공동 1당 체제가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환담장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좌석배치로 국회사무처와 정당 실무진들 간에 신경전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

다. 결국, 이날은 논의 끝에 '나·이·선수' 원칙을 세워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공식선거법에서 그 해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정당순위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투표용지의 기호를 정할 때에는 동일 의석 정당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105조 5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차적으로 동수이지만 선거법 등 여러 법률적 내용이나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1등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우리 더민주가 총선 민의로서는 1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2당이 맞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

를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연일 '문재인 때리기'

"구역역 사고 '친문 인사'가 원인...공식 사과해야"

새누리당이 구역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가 서울메트로 감사로 임명된 것을 포함한 '낙하산 인사'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문 전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아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은 철저히 숨기고 번지수가 틀린 무책임한 낙하산 공세만 하다가 급기야 '헛공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출연해 출국하

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메트로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명한 지용호 감사는 전형적인 '친문재인 인사', '낙하산 인사 전형'이란 사실까지 드러났는데도, 아직 일인방구 사과조차 없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 전 대표는 남 탓을 그만하고 관련 의혹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표가 전날 내팔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사과는 가능하단다"면서 "오늘이라도 이번 사고에 대해 진술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개헌 필요성은 '공감'...내용·시기는 '이견'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물론 대선 주자들까지 하나둘씩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날 것이

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개헌 현실화의 관건인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부겸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야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은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과 시기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다. 우선 내용과 관련해 호 전 시장, 문 전 대표, 박 시장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손 고문도 대통령제 유지가 기본 입장이다.

반면 김 전 대표와 원 지사, 남 지사는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내각제를 가미한 분권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개헌 시기도 천차만별이다. 원 지사와 손 고문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도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대선주자들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의원 60명, 6월 15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야당 의원 60여명이 6월15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정책부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정책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재임 시절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에서 한 연설 내용을 소개, "박 대통령도 6·15 공동선언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며 "결의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더민주 추미애·박영선·안민석·우원식 의원 등과 국민의당 소속 박지열·최도자·최경환 의원 등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